

세계 속의 대한민국

함께 가는 큰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국민대통합]

과거와의 화해, 미래를 위한 디딤돌입니다.

국민통합은 우리가 이뤄야할 필수 과제입니다. 반쪽짜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100% 대한민국을 위해,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미래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새누리의 진단

- 1979년 10월의 부마민주항쟁은 민주화 역사에서 3·15의거와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군사독재에 항거한 범시민적 민주화 운동임과 동시에 5·18광주 민주화운동과 6·10항쟁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적인 항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나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 당시 계엄군과 경찰의 진압과 수사과정에서 불법적 인권유린과 불법적 군사동원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국가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 구제 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물론 진화위 조사의 제한성을 인정하여 이례적으로 ‘위법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관련 피해자를 확인’하는 진상규명을 권고하였음.

새누리의 약속

-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과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보상·예우
- 부마민주주의재단 설립

새누리의 실천

- 2012.11.2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예우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제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새누리의 진단

- 1972년 12월 27일 개정된 제8차 개정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해 수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의 대상이 되는 ‘긴급조치’의 범위
 - 1974년 1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 1974년 4월 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 1975년 4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
 - 1975년 5월 13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 대통령 소속으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위원회’ 설치
 - 대통령이 선임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
 - 긴급조치로 부당한 형사상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심의·의결
- 긴급조치피해자로 인정되면 위원회가 특별사면 및 복권 건의와 전과기록 말소 요청, 복직이나 학사징계기록말소 권고

새누리의 실천

- 2012.11.26 「대한민국 헌법 제 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제출